

## 2 은행 퇴출 후 부작용과 보완 과제

- (현황) 정부와 인수은행간에 핵심 쟁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5개 퇴출은행의 자산·부채 인수 계약이 지연되고 있음
- (문제점) 금융혼란의 가중, 퇴출은행과 거래하던 기업의 자금난 심화, 향후 인수은행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과제) 자산·부채 인수 계약의 조속한 체결을 통해 금융 결제 기능을 복원시키고, 퇴출은행 거래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함

### □ 현황

- **지난 6월 29일에 5개 은행의 퇴출이 결정된 후 정부와 인수은행간에 자산·부채 인수(P&A) 계약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나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음**
  - 퇴출은행의 원화지급보증은 인수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자금난으로 인한 우량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인수은행이 인수한 자산이 추가로 부실화될 경우 성업공사가 재대입해 주는 기한은 당초 방침대로 6개월로하기로 하였음
  - 퇴출은행의 신탁자산은 모두 인수하기로 결정되었고, 고용승계 문제와 자회사 인수 문제는 인수은행측 주장대로 인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되었음
  - 그러나 계약당사자에 예금보험공사를 포함시킬지 여부, 성업공사가 인수할 부실자산의 범위, 증자지원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자산·부채 인수(P&A) 계약 체결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 □ 문제점

- **사전 대비 소홀로 금융 혼란의 가중과 인수 계약 지연을 야기하였음**
  - 퇴출은행 직원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못하여 전산 시스템이 마비됨으로써 인수은행에 의한 예금 지급 지연, 결제 시스템 마비 등의 사태가 야기되었음
  -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퇴출은행에 예금을 보유하고도 부도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 또한 퇴출 및 인수은행의 확정과 발표 이전에 정부와 인수은행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출은행 결정 후 인수 조건의 협의에 지나치게 장시간을 소비하고 있음

<정부 - 인수은행간 입장 비교>

쟁점	인수은행	정부	진행상황
부채초과분 보상 방법	현금출연	현물출자	출연합의
추가부실 보상 기간	일반여신 1년간, 지급보증 및 대지급 항시	일반여신 6개월간, 지급보증 1년간	6개월만 보상
지급보증	수출입관련 지급보증, 대지급사유발생분만 인수	모두 인수	원화지급보증 인수 제외, 중소기업분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지원 검토
고용승계	결정서에 승계 의무 없음 명시	명시할 필요 없음	고용승계 의무 없음에 합의
증가지원	결정서에 우선주로 증자 하는 것 명시	정부의 증자 지원 의지 표명으로 충분	합의 못함(선진국 사례 참조하기로 함)
자회사	인수 못함	선별 인수	인수 안함
업무용 부동산	6개월내 업무용 부동산 인수 여부 결정	계약전 인수대상 결정	합의 못함(인수에 따른 손실 자산·부채 평가 반영)
후순위채권	인수 못함	인수	인수 합의
계약당사자	예금보험공사 포함	예금보험공사 불포함	합의 못함
성업공사인수 부실자산범위	요주의 여신중 법정관리·화의, 협조용자 여신은 성업공사 인수	요주의 여신 모두 인수	합의 못함
신탁자산인수	실적 신탁 선별 인수	모두 인수	모두 인수, 단 손실분은 재정에서 보전

- 자산·부채 인수 계약 지연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도 추진되지 않고 있음
  - 퇴출은행의 신탁 자산을 인수은행이 인수하는데 합의하였으나 자산·부채 인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수은행들이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신탁 고객들은 신탁 자산의 중도해지 뿐만 아니라 만기상환도 받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수출입 관련 지급보증의 인수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산·부채 인수 계약의 미체결로 인하여 인수은행들이 퇴출은행이 발행한 보증서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수출입 금융이 마비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원화 지급 보증이 인수 대상 자산에서 제외됨으로써 퇴출은행과 거래하던 기업의 자금이 심화되었음
  - 약 7조원에 이르는 5개 퇴출은행의 원화 지급 보증이 인수되지 않기 때문에 퇴출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은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 상환 압박에 처할 것임
  -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선별 보증을 검토 중이라고 하나,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성사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지연될 전망이어

서 그동안의 도산을 막기 힘든 문제가 있음

**- 향후 인수은행들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인수은행이 인수한 퇴출은행의 자산 중 6개월 이내에 부실화된 자산에 한해서만 추가 배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인수은행의 부실 자산 규모가 늘어날 것임
- 또한 정부 의도대로 법정관리·화의·협조용자 여신을 포함하는 퇴출은행의 모든 요주의여신을 인수할 경우 인수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훼손될 것임
- 특히 정부에서는 충분한 증자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나 이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수은행의 손실 부분이 충분히 지원될지 여부는 불투명함
-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우려하고 있어 우량 인수은행들의 국제 신용도가 하락하고 있음

**□ 과제**

**- 자산·부채 인수 계약을 시급히 체결하여 합의된 사항들이 인수은행의 일선 창구를 통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특히 수출입 금융, 신탁자산 고액에 대한 예금 지급, 퇴출은행 거래 고액의 금융 결제 등은 자산·부채 인수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원활히 될 것임

**- 퇴출은행 거래 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특히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출은행의 지급보증을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
- 또한 퇴출은행과 거래하던 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조기 상환 억제책 및 만기 연장 독려가 은행 창구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수은행에 신규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함

**- 인수 계약 체결은 인수은행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함**

- 특히 인수 자산의 범위, 증자 방법 등은 향후 인수은행이 부담하게될 손실 규모를 철저히 반영하여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구되어야 함
- 또한 퇴출은행의 경영주·주주·예금주 등에게 손실 분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향후 추가적으로 있을 부실은행 정리시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김 재 킴 jckim@hri.co.kr ☎724-4022)